제198호(2021. 8. 30.)
KREI 농정포커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김상효·이계임·유기환

요 약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 식생활 보장을 포용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하지 못함.
-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효율적으로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 기반 역할 또한 가능함.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식사의 규칙성 보장,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 등의 효과 기대
- 이 밖에도 의료비 절감 효과, 전 산업 대상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불평등도 감소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향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과제는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식생활 교육 병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현물 지원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가공식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지속적인 평가/수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및 불법 거래의 방지,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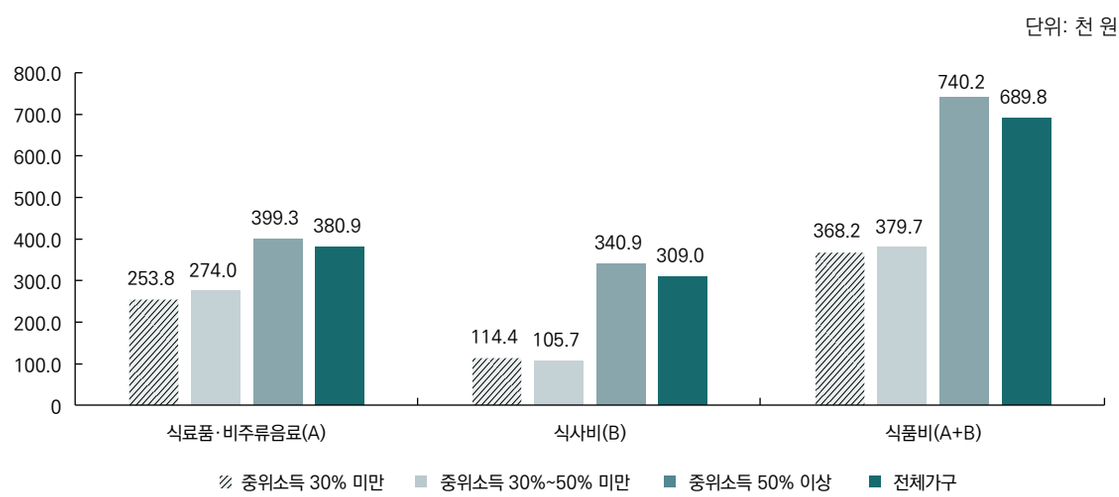
01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추진배경

1.1. 취약계층 식품 소비 및 영양 섭취 실태

저소득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

-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가구당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가구당 지출액의 67~72%에 불과함.
- 식사비 지출액은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11만 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 30만 9천 원의 1/3 수준임.
-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중위소득 30% 미만, 30~50% 미만 가구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모든 그룹의 식품비 지출액 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그림 1〉 중위소득 기준 소득 수준별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특히 저소득 가구의 우유류와 과일류, 육류 섭취량이 크게 낮은 것이 특징

- 식품비 지출액이 낮다는 것은 식생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섭취량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분위 1/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우유, 과일, 어패류, 육류 섭취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곡류 섭취량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크게 차이 나지 않음. 이는 취약계층이 곡물류 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식품 섭취의 불충분/불균형은 영양 부족/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취약계층의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표 1〉 소득분위별 식품류별 1인당 섭취량

단위: g/일, %

구분	소득분위별 품목별 섭취량				1/4분위와 4/4분위 차이 (g ,B-A)	1/4분위와 4/4분위 비율 (%, A/B)
	1/4분위 (A)	2/4분위	3/4분위	4/4분위 (B)		
곡류	293.3	289.7	291.9	295.8	2.5	99.2%
채소류	302.6	299.6	318.1	325.9	23.3	92.9%
과일류	134.0	156.0	161.2	180.7	46.7	74.2%
음료류	156.3	205.5	235.3	271.3	115.0	57.6%
육류	120.9	116.5	141.2	140.6	19.7	86.0%
어패류	95.0	104.5	108.2	119.9	24.9	79.2%
우유류	61.4	82.6	91.0	94.4	33.0	65.0%

자료: 연미영(2019).

취약계층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상태도 심각해 농식품 지원제도의 확대 추진 필요성이 증대

- 소득 수준별로 식품 불안정률, 영양 섭취 부족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등에 대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중위소득 30%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의 식품 불안정률은 약 9.8%에 달하여 중위소득 50% 이상인 그룹에 비해 현저히 높음. 영양부족자 분율도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도 중위소득 50% 이상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임.

〈표 2〉 소득분위별 식생활 실태 및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

단위: %

구분	중위소득별				중위소득 30% 미만 그룹과 50% 이상 그룹 간 차이 (%p, A-B)	중위소득 50% 이상 그룹 대비 30% 미만 그룹의 비율 (%, A/B)
	30% 미만 (A)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B)		
식품불안정	9.8	10.3	7.3	1.2	8.6	816.67%
영양섭취부족	20.6	16.6	16.5	12.4	8.2	166.13%
에너지부족	42.2	36.3	35.8	30.1	12.1	140.20%
고혈압	47.8	36.7	26.4	18.9	28.9	252.91%
당뇨	17.8	15.9	11.3	6.4	11.4	278.13%
고지혈증	22.2	19.2	18.4	14.0	8.2	158.57%
비만	20.8	17.8	15.9	18.0	2.8	115.56%

주 1) 식품불안정: 식품불안정성은 조사마다 산출 방법이 상이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 식품안정성 영역의 문항(식생활 상황 관련 문항)을 바탕으로 산출됨.
2)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래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3) 에너지 부족 비율은 그룹 내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인 섭취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김상효 외(2021a).

1.2. 취약계층 대상 기존 농식품 지원제도의 한계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농식품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이 충분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지자체 제출 통계자료 및 지방재정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을 바탕으로 농식품 지원제도의 예산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20년 기준 농식품 지원제도의 규모는 2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이하 생계급여 대상자로 약칭)에게 지급되는 식품비 지원 관련 예산의 비율이 69.9%로 대부분을 차지함(김상효 외 2021a).
- 현금 보조 형태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조 6,000억 원 중 75.8%에 육박하며, 현물 보조 형태는 23.2%에 불과함(김상효 외 2021a).

〈표 3〉 우리나라 농식품 지원제도 예산 현황(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 총액(백만 원)	예산 비율(%)	비율(%)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현금보조	1,996,880	75.8	81.4	11.5	7.1	-
현물보조	610,712	23.2	14.1	38.3	45.9	1.7
가격보조	25,420	1.0	100.0	-	-	-
합계	2,633,012	100.0	65.9	17.6	16.1	0.4

자료: 김상효 외(2021a).

우리나라의 농식품 지원제도의 규모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에 양적으로도 부족

- 취약계층의 식품비 지출은 현행 농식품 지원제도의 절대적인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상대적 비교를 위해 GDP 1억 원당 농식품 지원제도 예산 총액을 비교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예산은 미국의 35.4%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현금 지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식생활/영양상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표 4〉 농식품 지원제도 규모에 대한 평가 – 미국 식품지원프로그램 예산과 비교(2020년 기준)

구분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미국 비율
식품지원제도 예산	2조 6,000억 원	103조 2,952억 원	2.5%
GDP 1억 원당 식품지원제도 예산	151,000원	426,000원	35.4%
주요 지원 방식	현금 지원: 69.9%	현물 지원: 80% 이상	
주요 전담부서(예산 비율)	보건복지부: 90% 이상	농무부: 99% 이상	

자료: 김상효 외(2021a)를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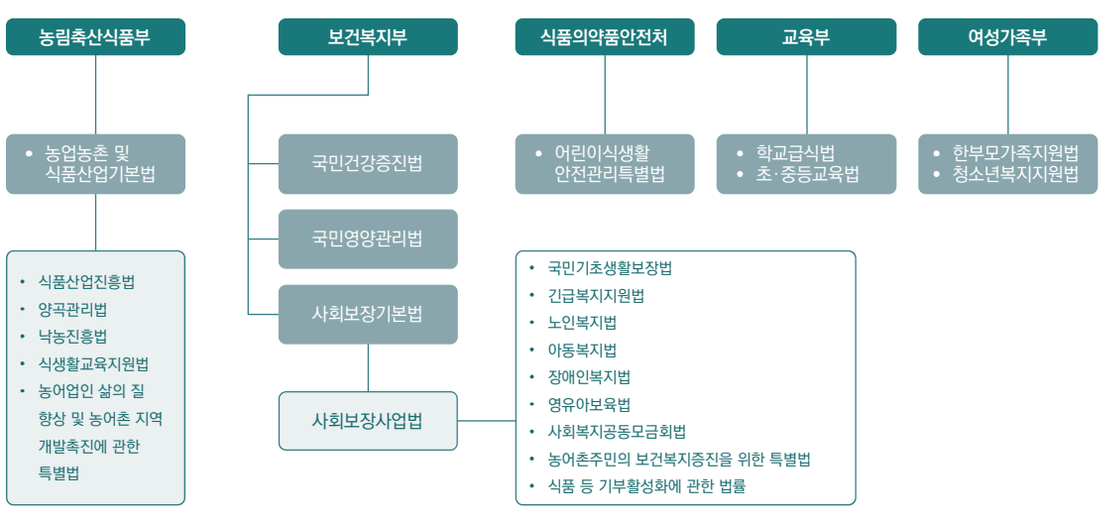
현금 지원은 타 용도 전환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의 식생활 증진 효과 저위 가능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에서는 식품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식품비 이외 부문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와 영양 섭취를 보장하기 어려움(이계임 외 2019).
  - 실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식품 지출액이 낮은(-8,442원) 반면, 교육비(+20,767원) 지출액, 피복·신발·가구·가사(+18,568원) 지출액, 수도·광열·주거(+25,931원) 지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수혜자의 식품 소비와 영양 섭취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함.
  -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불요불급한 지출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농식품 지원제도는 다수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원적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 간 연계가 어렵고, 국민 먹거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우리나라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법률 현황을 검토한 결과, 2개의 기본법 및 20여 개 개별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수의 법률, 다양한 부처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제도 간 연계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있어 효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및 식생활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현행 법령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식생활, 영양, 건강 지원 관련 유사 제도를 하나의 기본법에 담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이계임 외 2017; 이계임 외 2018).

〈그림 2〉 우리나라 농식품 지원제도 관련 법률 체계도



자료: 김상효 외(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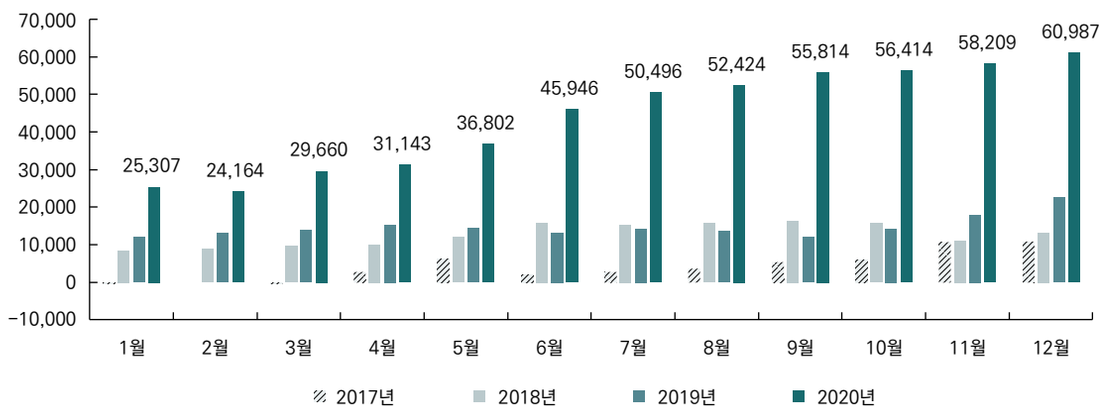
1.3. 코로나19 발생이 취약계층 식품 소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양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 유형별 가구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0년 이후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가 25,307~60,987명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전년 동기 대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변화

단위: 가구



자료: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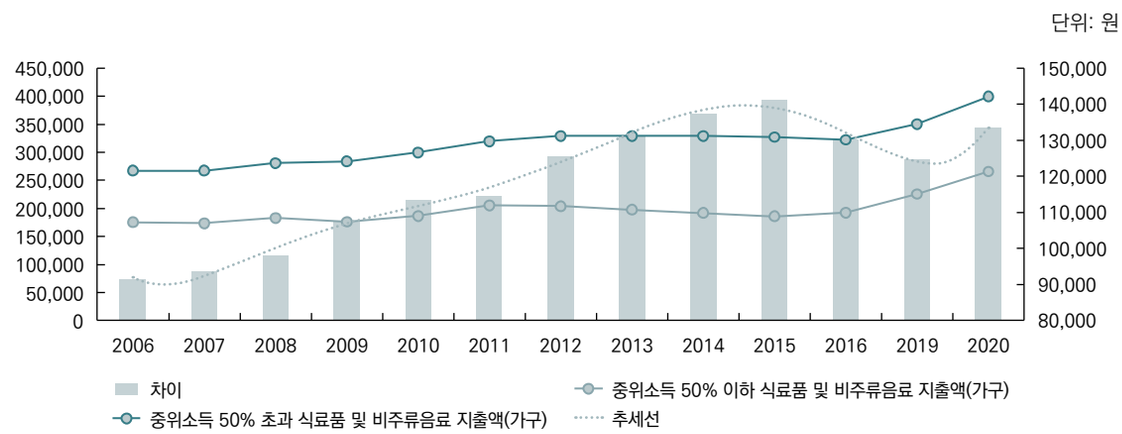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 곡물가격 등으로 인한 국내 농식품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식료품 지출 부담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전망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총지수는 2020년 1월 105.8에서 2020년 12월 105.7로 오히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축수산물 CPI는 2020년 1월 115.2에서 2020년 12월 122.7로 6.5% 증가하였음. 2021년에도 농축수산물은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외식의 경우에도 동 기간 110.8에서 111.64로 0.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곡물가격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정체 혹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8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식품 생산비를 증가시켜 국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
- Cavallo(202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코로나19 CPI와 통상적인 CPI의 차이가 6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됨(브라질: +1.11%p, 칠레: +0.59%p, 남아공: +0.54%p, 프랑스: +0.54%p, 미국: +0.45%p, 한국: +0.43%p).
- 코로나19 확산 이후 곳곳에서 발견되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확대 운영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수준별 식품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장기 시계열을 활용하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격차를 살펴봄.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간 식품비 지출액 격차를 분석해 보니 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액의 경우, 2006년 두 집단 간 격차는 월평균 9만 2천 원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에는 월평균 14만 1천 원 수준, 2020년에는 월평균 13만 3천 원 수준까지 확대됨. 이로 인해,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확대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그림 4〉 소득 수준별 식품비 지출액 변화 추이(월평균)



주: 좌측 세로축은 소득 수준별 지출액을 의미하며, 우측 세로축은 두 그룹 간 지출액 차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0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평가

2.1.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과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현물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국정과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됨('17)
- (타당성 연구)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및 영양 실태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 대상·금액·전달체계 등 사업 설계안 마련('18. 2.)
- (실증 연구) 농식품바우처 사업에서 전자카드 결제방식시스템 도입·적용을 추진함. 또한 춘천/완주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의 농식품 지출액 증가 등의 사업효과를 검증('18. 6.~'19. 3.)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심의 의무화('18.4. 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 타당성, 중복성, 법적근거 및 바우처 전달체계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18. 11.)
- (2020년 시범사업 추진) 4개 지자체, 시범사업 적용(예산 35억 원)
- (추진체계 구축)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완료('20. 2.)
- (2021년 시범사업 추진) 9개 지자체, 시범사업 적용(예산 171억 원)

2.2.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현황

(지원 대상): 식품비 지출 저위와 영양 섭취 부족 등 식생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시장소득과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함.
- 2020년 시범사업에서는 4개 시·군의 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8,18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9개 시·군의 1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8,324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표 5〉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가구

연도	시·도	시·군	읍·면·동(개)	대상 가구(호)
2020	경북	김천시	22	6,814
	세종	세종시	19	4,748
	전북	완주군	13	5,368
	충남	청양군	10	1,250
	합계		64	18,180
2021	경남	거제시	18	4,395
	충북	괴산군	11	1,663
	전북	김제시	19	6,017
	충남	당진시	14	3,108
	경남	밀양시	16	4,922
	경북	예천군	12	2,253
	충남	청양군	10	1,003
	강원	평창군	8	1,112
	전남	해남군	14	3,851
	합계		122	28,324

자료: 농식품바우처 aT 홈페이지(http://voucher.witches.co.kr/, 검색일: 2021. 7. 30.).

(지급 방식): 타 용도 전환이 낮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카드 기반 현물 지원

- 시범사업 전자카드 발급·판매점은 '18년 실증연구 시 농협 계통을 통해 입증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협 관련사가 참여함. 타 카드사, 대형 유통업체 등 판매점은 수익 구조상 시범사업 참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능 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농협 계열 로컬푸드직매장 포함)이며, 농협 계열이 아닌 로컬푸드직매장도 부분적으로 참여함.
-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주문·배달 방식으로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다원화함.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 방식을 도입하였고, 각 지자체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주문·배달 방식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표 6〉 2021년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능 매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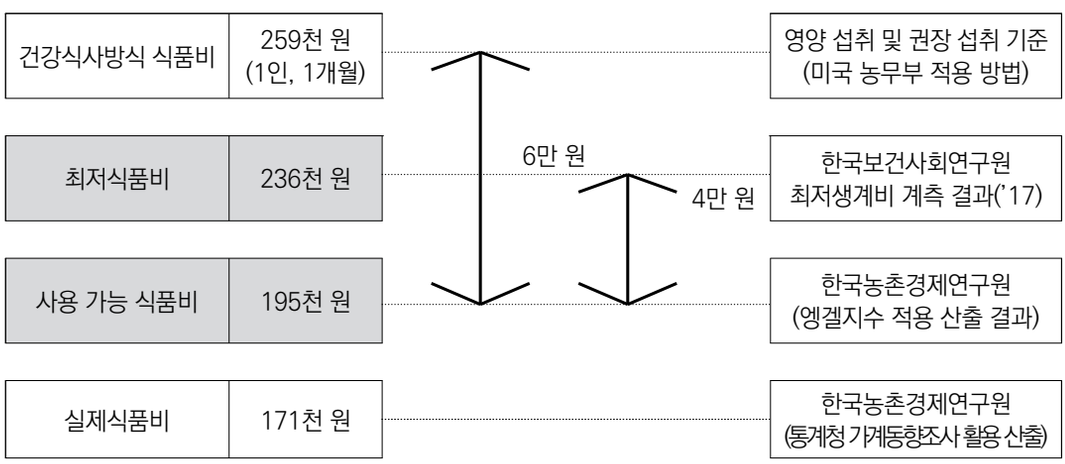
지자체	경남 거제시	충북 괴산군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경남 밀양시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강원 평창군	전남 해남군
취급 가맹점	23개소	14개소	20개소	19개소	16개소	16개소	13개소	11개소	19개소

자료: 농식품바우처 aT 홈페이지(http://voucher.witches.co.kr/, 검색일: 2021. 7. 30.).

(지원 금액):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 가능 식품비(행복e음 산출)의 차액인 4만 원(1인 기준)을 지원

-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김태완 외 2017)와 저축을 고려하여 도출된 사용 가능 식품비 간 차액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음. 이는 1인당 한 달 기준 최저식품비(23만 6천 원)에서 사용 가능 식품비(19만 5천 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4만 원 수준임.
- 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은 영양 보충적 차액 지원(4만 원)에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차등 지원함.

〈그림 5〉 2021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지원 금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표 7〉 2021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지급 기간
지급 금액	40,000원	57,000원	69,000원	80,000원	…	3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구입 가능 품목):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서는 과일, 채소, 잡곡, 축산, 우유, 꿀, 계란으로 확대

- 구입 가능 품목은 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 식품 소비 패턴, 소비자 선호도, 국내산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선정함. 특히,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함. 또한 구입 가능 모든 품목(6만여 개) 중에서 국내산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 2020년 시범사업에서는 구입 가능 품목을 신선식품인 과일, 채소, 우유, 계란으로 제한하였으며,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잡곡, 축산, 꿀을 추가하였음. 본사업 추진 시에도 품목을 확대할 예정임.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 지자체별로 역할 분담

- 2021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을 수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담 기관으로서 사업 운영·관리, 결과 분석 및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수혜자 교육 및 사업 홍보를 실시함. 각 시·도는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국비 교부 신청을 관리·담당하고, 시·군은 국비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혜자 확정, 읍·면·동은 사업 수혜자 확인 및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담당함.

(사업 예산): 2020년 35억 원에서 2021년에는 171억 원 규모로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2018년 첫 실증연구 당시 5억 원 규모로 실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구입 가능 품목,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2020년에는 35억 원, 2021년에는 171억 원 규모로 확대함.

〈표 8〉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진 중)
	실증연구(2개소)	시범사업(4개소, 1년차)	시범사업(9개소, 2년차)	본사업(전국)
국 비	5	35	89	13,402
지방비	-	-	82	3,325
총계	5	35	171	16,7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성과와 본사업 전환 시 기대효과

2020 시범사업 성과

40대, 1인 가구의 활용률 높고, 구매 품목은 과일/채소/계란 순

- 시범사업 참여 소매유통업체 판매자료(POS)와 수혜자 소득 기초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사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활용률이 가장 높았고,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의 농식품바우처 활용률이 가장 높았음(김상효 외 2021b).
- 농식품바우처 활용 영향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에서도 읍 지역이나 동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연령대가 40대인 가구, 1인 가구일수록 농식품바우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가 많고 개발된 지역(동〉읍〉면), 5세 이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일수록 활용률이 다소 높았고, 성별, 소득 수준(중위소득 30% 이하 및 이상 등) 요인은 활용률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해 주로 구매한 품목으로는 과일(35.2%), 채소(20.8%), 계란(10.2%), 우유(8.5%) 순으로 나타났고, 함께 구매한 기타 품목은 가공식품(59.4%), 육류(18.4%), 수산류(12.1%), 곡류(3.9%) 순으로 나타남.

식생활 개선 효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는 기존에 비해 아침식사율 5%p 증가, 식사 규칙성 7.6%p 증가, 식생활 만족도 0.5점/5점 증가, 국내산 관심도 0.4점/3점 증가, 지역산 관심도 0.2점/3점 증가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9〉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식생활 개선 영향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증감	비고
아침식사율	66.6%	71.6%	5%	남성, 세종시, 60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지원가구 개선율 큼
식사의 규칙성	49.2%	56.8%	7.6%	남성, 완주군, 60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생계급여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개선율 큼
가족의 건강 평가	1.71점(3점)	1.95점	0.24점	세종시 개선율 크며, 성별, 소득 수준별 차이 미미
식생활 만족도	2.81점(5점)	3.31점	0.5점	지원 전후 개선도가 가장 큼 모든 분석요인에서 개선도가 비슷
식생활 도움 정도	-	4.42점(5점)	-	5점 만점 수준으로 높은 긍정 인식 50대 척도 평균이 가장 높음 소득 수준별, 성별, 지역별 차이 미미
건강 및 영양보충 도움 정도	-	4.35점(5점)	-	
지원품목 1일 1회 이상 섭취 증가율	과일 35.5%, 계란 32.4%, 채소 21.8%, 우유 19.0% 순으로 증가			
국내산 농산물 관심도	2.41점(3점)	2.77점	0.36점	국내산 관심도 지원 전후 크게 증가 여성, 김천시, 50대의 관심도 크게 개선
지역산 농산물 관심도	2.33점(3점)	2.55점	0.22점	국내산 관심도보다 낮은 수준

주: 아침식사율은 아침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
자료: 김상효 외(2021b).

대다수의 수혜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았음. 구매 가능 품목의 확대, 지원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96.3%가 농식품바우처 재참여 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업 만족도는 4.28점(5점 척도),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 도움되는 정도는 4.5점(5점 척도)으로 높게 평가함.
-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87.5%가 구매 가능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수혜자의 75.4%는 지원 금액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 한편, 농식품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및 이용 및 결제 방식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각각 61.9%, 83.3%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반면, 각 29.1%, 10.2%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이는 2020년 시범사업 당시 사용 가능 매장의 수가 제한적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본사업화될 때에는 대상자를 전국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1인 가구 기준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

- 지역·소득 수준별로 시범사업 효과 및 식품비 지출, 영양 섭취 실태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맞게 건강 식사 방식 가정식비와 취약계층의 사용 가능 식사비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인 1인 가구 기준 6만 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표 10〉 본사업화 가정 시 농식품바우처 지원 금액

단위: 원

구분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A)	사용 가능 가정식비(B)	바우처 지원 금액(A-B)
전체 가구	285,095	314,047	불필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		222,312	62,783
중위 50% 이하		222,932	62,163

자료: 김상효 외(2021b).

본사업 기대효과

영양권장섭취 기준 1인당 6만 원 지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대상 가정

- 농식품바우처 지원 본사업에서의 지원 금액 산출 결과를 활용하여 1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함. 평균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곱하여 가구당 평균 67,350~69,195원(=60,000원*$\sqrt{\text{평균 가구원수}}$) 이 지원된다고 가정함.
-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DID) 분석 결과, 평균 38,000원의 식품비가 지원되었을 때 식품비 사용이 평균적으로 33,84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계임 외 2019). 이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 금액의 11%를 제외한 나머지 89%가 식품비 지출로 이어졌다고 가정함.
- 한편,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12개월) 60,000원(1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함. 대상자 선정의 용이성을 위해 1) 생계급여 수급 가구, 2) 중위소득 50% 이하(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로 구분하여 분석함.
- 농식품바우처 사용 금액 중 품목별 사용 비율은 이계임 외(2019)의 실증연구 결과를 인용함. 과일 23.2%, 채소 26.4%, 곡물 42.1%, 우유 8.3% 수준임. 구입 가능 품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석 결과를 인용 시 주의해야 함.

〈표 11〉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시 연간 소요예산 추정치

구분	가구 수 (중복 제거)	1개월 지원비 (1인 기준, 원)	가구당 가구원 수	가구당 1개월 지원비(원)	농식품바우처 지원금 총액 (12개월 기준, 억 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	1,029,263	60,000	1.26	67,350	8,318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998,379	60,000	1.33	69,195	16,593

주 1) 위 추정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며, 식생활 교육이나 푸드플랜 연계 및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임.
2) 가구당 가구원 수는 연도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치를 활용함.
자료: 김상효 외(2021b).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①: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1조 6,593억 원 지원 시 1조 4,777억 원이 농식품 소비로 활용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과일, 채소, 곡물, 우유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가한 식품비인 1조 4,777억 원은 과일 3,423억 원, 채소 3,903억 원, 곡물 6,227억 원, 우유 1,225억 원으로 분배

〈표 12〉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 증대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지원금 총액	식품비 증가	과일 지출액 증가	채소 지출액 증가	곡물 지출액 증가	우유 지출액 증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6,593	14,777	3,423	3,903	6,227	1,225

자료: 김상효 외(2021b).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②: 의료비 절감 효과 분석 결과, 수혜자의 한계저축성향에 따라 연간 3,372억~4,435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분석에 따르면 식품비 비율이 1% 증가 시 의료비 지출 비율은 0.3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인적 의료비 절감액은 1,234억~1,623억 원이며, 건강보험 보장률 63.4%를 적용한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은 2,138억~2,81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됨.

〈표 13〉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한계저축 성향	구축효과	지원금액 (원)	취약계층 의료비 절감액 (A) (단위: 백만 원)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 (B) (단위: 백만 원)	총 의료비 절감액 (C)=(A)+(B) (단위: 백만 원)
0	0.11	60,000	123,421	213,795	337,216
0.5	0.11	60,000	142,868	247,482	390,351
1	0.11	60,000	162,316	281,170	443,486

자료: 김상효 외(2021b).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③: 산업파급효과 분석 결과, 전 산업에 1조 3,485억 원의 생산과 9,464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2만 9,159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요 증가 및 대체효과에 따른 비지원 품목의 수요 감소 효과, 구축효과에 따른 비식품 소비 증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표 14〉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인한 산업파급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바우처 지원 품목 관련 산업	17,814	10,249	32,491
바우처 지원 품목 외 식품산업	-6,480	-1,724	-4,516
그 외 비식품 산업	2,151	939	1,183
계	13,485	9,464	29,159

자료: 김상효 외(2021b).

본사업화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④: 불평등도 개선효과 분석 결과, 가정식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다소 감소, 경상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상소득 및 가정식비 지출액에서의 불평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한국복지패널의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사업 전후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제시함.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가정식비에 대한 지니계수는 0.284에서 0.278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4593에서 0.4591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표 15〉 농식품바우처 본사업화 추진으로 인한 불평등도 완화효과

구분	지원 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지원 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후
경상소득	0.45928	0.45914	0.45911
가정식비	0.28430	0.27816	0.277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03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추진 방향과 과제

농식품 지원제도의 기본 추진 방향은 국민의 먹거리 보장, 농업/지역과의 연계,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제도 간 연계성 강화

- 농식품 지원제도는 국민의 현재 및 미래 건강 식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 농식품/영양소 섭취를 보장해야 하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및 지역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 기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수혜자 생애주기, 소비환경 특성에 따른 식생활 특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식품 지원 전달 방식을 구체화하고, 제도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별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모니터링, 수혜자(식생활)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중점 고려 사항은 ①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② 식생활 교육 병행, ③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현물 지원이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식품 지원제도인 SNAP의 경우, 수혜자의 건강 및 영양 증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공식품을 허용한 것이 원인일 수 있음. 더불어, 가공식품 등 지원 품목의 확대는 비가역적일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 포함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농식품 지원제도 중 영양 지원 목적 지원제도인 영양플러스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김상효 외 2021a). 농식품 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증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연동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농식품바우처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대상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본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불법 거래 등의 방지,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모니터링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로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율 및 활용률, 취약계층의 식품 지출액 및 영양 섭취 수준 변화, 농식품바우처 지원 품목별 구입 경험 또는 섭취 빈도 등이 있음.

식품소비행태를 반영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품목 확대로 취약계층 효용 증대 도모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하여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구매했던 기타식품은 발효유, 두부류와 육류임. 이 품목들은 취약계층의 부족 영양소 보충에도 도움이 되는 품목이므로, 향후 공급 품목의 범위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할 때 해당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다만, 가공식품으로의 공급 품목 확대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바, 시범사업단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농식품바우처를 활용해 많이 구매한 품목으로는 과일(35.2%), 채소(20.8%), 계란(10.2%), 우유(8.5%) 순으로 나타났고, 함께 구매한 바우처 외 품목은 가공식품(59.4%), 육류(18.4%), 수산류(12.1%), 곡류(3.9%) 순으로 나타남.

농식품 현물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물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공고해야 함. 특히,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공급-식생활 복지-영양관리 3가지 영역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 시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영양관리법」, 의원발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등으로 지원 근거를 뒷받침하였으나,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명시적 법적근거가 필요함.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농식품 복지 업무 전담조직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의 대상 품목 등 관련 분야의 동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현물 중심의 농식품 지원제도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조정·추진해야 하는데,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농식품 지원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지원 정책 간 연계/통합을 도모해야 함. 단기적으로는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농식품 지원사업의 업무 영역 중복 문제와 국간 통합/조정의 문제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사회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를 고려한 새로운 지원제도와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임.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소비계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담당, 식생활계에서 바우처 수혜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본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국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김상효·이계임·문동현·허성윤·이욱직·유기환·최슬기·김정선·이수빈. 2021a.『농식품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이계임·허성윤·이욱직·지정훈·유기환. 2021b.『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완·김문길·여유진·김미곤·김현경·임완섭·정해식·황도경·김성아·박형존·윤시몬·이주미·신재동·김선·김은지·김혜승·우명숙·윤상용·이선우·정재훈·최민정. 2017.『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미영. 2019.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섭취 실태." 농식품바우처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이계임·김상효·엄진영·김부영·김다혜. 2018.『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김상효·김부영. 2017.『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R8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김상효·임소영·허성윤·한정훈. 2019.『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avallo, A. 2020. "Inflation with Covid consumption baskets (No. w273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mdis.kostat.go.kr〉.

농식품바우처 aT 홈페이지. 〈http://voucher.witches.co.kr/〉.

2021년

제198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김상효, 이계임, 유기환)
제197호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서형주)
제196호 2021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20년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우병준, 박혜진)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정도채, 한이철)
제193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최용호)
제192호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서홍석, 김충현, 김준호)
제191호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김종인, 한은수, 은종호, 서강철)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제18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효,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김미복 연구위원 061-820-2323 mbkim@krei.re.kr
내용문의 김상효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98호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1. 8.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